

조선시대 근대산업화의 시도와 실패-선진사례와 비교

강철규

차례

서론: 근대 산업화의 패턴과 조건

I.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사례

1. 산업화 담당세력은 어디서 왔나
2. 종교 개혁파들의 대규모 북유럽 이주
3. 시장경제 제도 출현 여부
4. 근대국가의 역할
5. 대외무역의 확장

II. 후발국 일본-명치유신과 산업화

III. 조선시대 산업화의 초기 조건들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

1. 산업화 추진 주체의 부재
2. 지배세력의 산업관-농자천하지대본 무분억말 흥리제해
3. 시장경제의 수준
4. 정부역할 부재 및 해외무역 금지
5. 실학파 박제가의 신분제 개혁 주장과 한계

IV. 개화파의 개혁실패와 동학농민혁명의 좌절

1. 갑신정변의 정강과 실패 원인
2. 사민평등과 토지균분을 내세운 동학농민혁명
3. 일제에 의해 변질된 갑오개혁
4. 갑오개혁의 평가와 그 후 영향

결론

<후기> 조선상공인 형성과 관련하여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나?

서론-근대 산업화의 패턴과 조건

이 글은 조선 시기에 산업화가 시도되었거나 이루어진 일이 있었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대 산업화를 이끌 주역인 상공인 계급이 등장하여야 한다. 상공인과 기업가들이 역할을 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 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독립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과연 그러한 일이 조선 시기 518년 동안에 발생했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생명,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적 신뢰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간존중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가치들의 실현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추구와 좋은 삶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좋은 삶과 사회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증가하여야 가능해진다. 역사적으로 신분평등, 경제성장, 견제와 균형, 법치, 기술 발전,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질 때 개인과 사회의 역동성, 추진력, 창의력과 같은 에너지가 확산되었다.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대 산업화도 사회발전의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에너지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성공시켰다.¹⁾

부연 하면 신분평등이 진전될 때 사회경제는 발전하였다. 근대 산업화도 중세 봉건적 신분제도가 해체되면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상공인들이 등장하여 이룩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들이 주도하여 획기적으로 높여 놓았다. 그러한 배경에는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가 성립하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과 자유 계약권 등 시장경제의 기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 보호한다. 아울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과 같은 견제와 균형을 권력분립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기능이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열정과 희망을 품고 행복 추구의 좋은 삶을 이루게 된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서양의 근대 산업화는 이러한 매개변수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이룩한 것이다. 그 과정은 구체제와 기득권에 대립하고 투쟁하며 혁신하는 험난한 길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조선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존재하였는가를 평가하려 한다. 이를 위해 산업화 특히 근대 산업화의 패턴은 무엇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를 이들 세 나라와 후발국이었던 일본의 근대 산업화를 예로 들어 살펴보고, 조선에서 그러한 조건들이 형성되었는가 안 되었다면 왜 그랬을까를 검토한다. 비록 실현은 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초정 박제가의 신분개혁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19세기 후반 강화도조약으로 강제 개방이 된 이후 연이어 나타난 개화파의 갑신정

1) 신분평등, 경제성장, 견제와 균형, 법치와 신뢰 등은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라는 인간존중의 경제학에서 중요시하는 매개변수들이다. 졸고(2023) 사회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인간존중의 가치실현이 발전 참조

변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갑오경장 등의 혁명과 개혁의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근대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왜 실패하였는지도 설명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정의하여야 한다. 산업화는 ‘industrialization’ 즉 공업화라고도 한다. 그것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류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의 비중이 늘어나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장제 제조업이 출현하여 증가하는 것을 근대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작성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1963년에 농업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63.1% 와 8.7% 이었다. 이때 취업자수는 776만 명이었다. 농업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늘어나 두 산업 종사자 수가 각각 24.9%와 24.5%로 거의 같아지는 해는 23년 후인 1985년이였다.²⁾ 그 후에도 계속해서 농업종사자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늘어난다. 산업혁명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 제조업과 농업종사인구가 35.9%와 35.7%로 비슷해지는 것은 대략 1801년 경이다. 1522년에 농업인구가 68.2%로 공업인구 20.2%의 3.4배 이었다.³⁾ 이 시기로부터 상공업이 서서히 발전하여 명예혁명을 거친 후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제조업과 농업인구가 같아지는 해는 1963년경이다. 명치유신이 일어나 시작되는 1870년대는 농업인구의 비중이 제조업 비중의 5배 정도였다. 그로부터 대략 90년 정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제조업 종사자가 늘어나 같아지는 시기는 산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기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어 정착하는데 이것을 산업화의 패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농업사회에서 농업인구가 점차 줄고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인구가 늘어나 그 비중이 거의 같아진 후 점차 그 차이가 더 벌어져 정착한다면 산업화 시대라고 간주하자.

이러한 산업화의 조건들은 세계 역사상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들의 예에서 나타난다. 그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5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 첫째 산업화 추진 주체가 형성되었는지, 둘째 필요한 자본과 기술은 있었나, 셋째 시장경제가 나타나 작동하였나, 넷째 시장경제의 작동과 지속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지켜주는 정부는 존재하였나, 다섯째 해외무역 개방이 이루어졌나 등이 다.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I.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사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곳은

2) 아마도 이것은 세계산업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이었을 것이다.

3) 영국(잉글랜드)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남자)의 비중이 비슷해진 시기는 1801년. 이 시기에는 농업이 영국 GDP의 약 31%, 제조업이 약 33%를 차지하며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Broadberry(2011) 참조

네덜란드이었다.

매디슨의 <세계경제: 역사상의 통계>는 산업화가 성공했던 나라들의 초기 발전 순서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듯이 1500년에서 1700년 사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인구는 각각 2배씩 늘어나고 1인당 GNP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500년에 양국의 1인당 GNP가 761달러와 714달러로 네덜란드가 조금 높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700년이 되면 네덜란드는 2.8배 증가한 2,131달러가 되어 1.7배 증가하여 1,250달러가 된 영국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불붙기 시작한 1700년부터 1820년간을 비교하면 산업화의 주도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간다. 영국의 인구는 2.5배나 크게 증가한 2,124만 명이 되었고, 인구급증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1.4배 증가하여 1,706달러가 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네덜란드의 인구는 190만 명에서 233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1인당 GNP는 16%가 줄어든 1,838 달러가 되었다. 확실히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시대였으나 18세기는 영국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그 후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산업화의 필수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산업화를 담당할 사회계급의 존재 여부, 즉 그들 산업화 담당 인력은 어디에서 나왔나,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산업화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발전하는데 그러한 시장경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즉 상공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제도 예컨대 사유재산권 제도, 자유계약권, 공정거래 등의 존재 여부와 이를 보장할 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나?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나타나듯이 공업발전을 가능하게 한 자본축적과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이 가능하였나? 시장경제의 발전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 수요 확대 여부 즉 시장이 형성되어 확대되었나, 외국과의 무역은 확대되었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그러한 조건의 성립 여부로 산업화 과정을 평가해 볼 수 있다.

<표1> 근대 산업화 시기 주요국 인구 및 1인당 GNP 추이

		1500	1700	1820
인 구 (만 명)	네덜란드	95	190	233
	영국	394	856	2124
	프랑스	1500	2147	3125
1 인 당 GNP(달러)	네덜란드	761	2131	1838
	영국	714	1250	1706
	프랑스	727	910	1135

자료: Maddison, <세계경제: 역사상의 통계>, Rogers 2010에서 재인용하여 편집

1. 산업화 담당 세력은 어디서 왔나

<네덜란드>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되어 기업 제도와 주식회사 제도가 나타난 곳은 네덜란드였다. 이곳 낮은 땅의 주민들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과 바스쿠 다가마의 인도양 항로의 개척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신대륙을 잇는 해상무역을 선점하여 부유해진 사람들이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세계 무역량의 상당량이 암스테르담 등 금융이 발달한 이 지역을 통과하였다. 이들 네덜란드인들은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써 16세기 시작된 성서주의와 근면 절약 금욕의 개신교 종교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위해 싸웠다. 가톨릭을 수호하는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5세와 그 아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16세기에 그들 조세수입의 40%를 이 지역이 중심인 부르고뉴 공국에 의존할 만큼 이곳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종교개혁운동을 탄압하였고 안정을 위해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브뤼셀에 주둔시키는 등 중앙집권 강화 조치도 취하였다. 이 들 저지대 주민은 과중한 조세부담과 종교개혁운동 탄압에 항거하여 가톨릭의 스페인과 1568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펠리페 2세와 궁정친구로 자라며 카를 5세의 총애를 받았던 오라녜 빌럼 1세까지 독립운동에 합세한다. 독립전쟁은 개신교들의 성상 파괴 운동부터 시작되었다. 1566년에 남부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격렬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다. 장 칼뱅이 '우상'이라 지칭한 성상들을 비롯한 가톨릭교회 구조물 파괴 운동은 단 3일 만에 400개의 성당에서 천사의 날개와 성자의 머리 등 대리석상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부수어버렸다. 계속된 성상 파괴 운동에 지친 암스테르담의 가톨릭교 세력은 1578년 5월 26일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이어서 1581년 과중한 조세부담에 항거한 상공인들과 중요 영주와 귀족들이 합세하여 네덜란드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그 후에도 독립전쟁은 계속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이 마감되는 1648년에 홀란트 등 북부지역 네덜란드가 완전히 독립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독립국을 만든 이들이 세계 최초로 관용과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건설하며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나가는 원거리 해상무역의 기회를 살려 초기 자본주의의 상공업을 발전시켰다. 이탈리아 인문주의 사상에 의한 르네상스가 '자유롭고 주체적인 근대인'을 탄생시켰다면, 북유럽에서 이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종교개혁을 실현시키고 기업제도와 주식시장을 도입한 것이 네덜란드인이었다. 1602년 세계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큰 이익의 인센티브가 있는 동서양 해상무역을 주도하였고 1609년에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스페인 함대와 의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세계 해상무역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4) 성상파괴 운동은 1566년에 일어났다. “왕이 아니라 가톨릭을 대상으로 한 이 운동은 1578년 5월 26일 마침내 암스테르담의 가톨릭교 세력이 백기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바다의 거지들이 시의회를 장악했다. 암스테르담이 칼뱅파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날이며 자유주의 도시로 태어난 날이다. 이제 끝없는 성장과 주식시장의 탄생, 돛대로 뻗어온 항구, 세계 곳곳에서 밀려 들어온 이민자들로 물결치는 거리가 이 도시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대변혁이었다.” Russel Shorto(2013) P.134

국내적으로 모직물 산업이 발전하였고 조선과 금융업을 발전시켰다.

언론 사상 출판 사업 등의 자유를 얻어내고 주식회사와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무역을 발전시킨 것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비트 행정관 시대⁵⁾였다. 해외무역업자들이 시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와 차별을 철폐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를 바꾸어 갈 자유와 기회를 주는 국가 운영 방식의 도입에 참여하였다. 상공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얻고 시의회에 참여하여 산업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17세기 암스테르담에는 스피노자, 존로크⁶⁾, 데카르트 등이 이곳에 거주 혹은 망명 생활을 하였으며 어떤 서적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가 40개나 존재하고 있었다. 데카르트 갈릴레오 등의 저서들이 이곳에서 출판되었다.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해부학 교실’에서 보듯이 과학탐구에도 열정을 보였고 대서양 시대 먼 거리 동방과의 해외무역을 주도하여 해운업과 금융업을 발달시켰다. 동인도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가 생겨났고 주식시장 제도가 운영되어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축적이 가능하였다.

<영국>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면서 산업혁명의 주도 세력인 상공인의 활약이 활발해진다. 기존 귀족들과 달리 신분이동과 부의 추구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열정을 가진 중간계층 출신의 상공인들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의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갔다. 권리장전 선언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고 법관의 임면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영란은행이 1694년 처음으로 설립되며 금리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진다.

상공인들이 늘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 시 전 토지의 1/4 정도나 되는 가톨릭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과 측근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에게 배분하자 신흥 소지주들이 나

5) 요한 데 비트Johan de Witt (1653-1672년간 행정관), 네덜란드 공화정 시기(1581-1795) 가장 전성기 혹은 황금기의 행정관; 1515년 이후 가톨릭의 스페인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전쟁을 1566년부터 시작하여 1581년 독립선언했으나 그 후 전쟁을 지속하여 1648년야야 완전 독립. 비트 행정관 시절에 크롬웰의 영국 공화정과도 협정을 맺은 바 있다.

6) 1683년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한 로크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개 해부 행사 참여 모습. 이곳에서 만난 람보르흐 목사 등 다양한 과학자 신학자 등과 교류하면서 명예혁명시 영국으로 귀국하여 발표한 인간은 종속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state of nature“이자 동시에 “자유로운 상태 state of libery“ 로 평등하게 태어나며, 공동체는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지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주장한 *Two treatise of Government* <통치론>을 준비했다. “어느날 사자 한 마리가 동사하자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 희귀 짐승을 공개 해부하겠노라고 광고했다. 로크도 이 공개 해부 행사에 참관했고, 그곳에서 필립 판 람보르흐라는 사람이 로크에게 다가와 인사...목사인 람보르흐는 프랑스의 위그노, 영국의 분리주의자, 네덜란드의 항론파 등 다양한 배경의 과학자와 신학자로 이루어진 모임의 일원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종교적 믿음과 새로이 등장한 철학의 공통 분모를 찾는 데 열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종교적 관용정책을 명확히 표명하는데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크는 이 모임에 개근 참석자가 되었다.” Russel Shorto(2013) P.346

타나고 상공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은 신분의 속박을 풀었고 몰수한 토지 분배는 소지주 등장과 상공업 진흥의 기회를 부여했다. 애스 모글루 등의 최신택서 권력과 진보(2023)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1558-1603)에는 런던 항구 도시들에서 강력한 상업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해외 교역에도 활발히 참여하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내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농촌에서도 이 시기 자영농과 숙련 장인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중있는 세력”⁸⁾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 결과 대헌장 이후 영주나 교회지도자 수도원장 등으로 구성되었던 초기 의회가 종교개혁 이후 점차 신택 소지주 즉 젠트리와 상공인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임스 1세 이후 왕실의 독점과 규제가 다시 강화되어 이를 완화 시키려는 의회와 왕권의 대립은 계속된다.⁹⁾ 의회는 1623년 새로 독점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을 통과시킨다. 그래도 여전히 해외무역에 대해서는 왕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¹⁰⁾

1688년 마침내 젠트리와 상공인 법률가 등의 세력이 중심이 된 의회가 명예혁명을 성공시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 권한을 확립하는 권력분립의 권리장전을 선포한다. 명예혁명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권이 강화되자 중간 계층으로써 부와 신분상승의 열망을 가진 이들 소지주와 상공인들은 더욱 확고해진 사유재산권과 자유계약을 토대로 활발한 기업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1694년 영란은행의 설립으로 시장거래 촉진과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업의 발달을 비롯한 산업혁명의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 발전도 뒤따랐다. 발명과 혁신을 촉진한 영국에서는 1623년에 이미 특허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발명가들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18세기에는 실용적인 과학혁명을 일으켰다. 방적기와 방직기 그리고 증기기관과 같은 공장제 생산기술과 수송혁명이 일어났다.¹¹⁾ 또한 16-19세기에 일어난 인클로저 운동으로 공유지와 농경지를 양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만들어 양모생산 증가와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를 촉진하여 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공장 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18세기 후반

7) 1536년에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상당한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남성인구의 2%가 종교 교단에 속해 있었고 종교 교단이 전체 토지의 무려 1/4을 소유하고 있었다. Daron Acemoglu and Simon Johnson(2023), p 248

8) Daron Acemoglu and Simon Johnson(2023), p 248

9) 1558년에 시작된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 후사 없이 죽어 Tudor에서 Stuarts 왕조로 바뀌어 제임스 1세가 등극한다. 이 시기의 독점에 대하여 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2012)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왕실의 권한은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왕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 일쑤였다. 당연히 신규참여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이런 착취적인 제도는 경제활동에 큰 해를 끼쳤고 의회에 몸담은 귀족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1600년대 광범위한 독점이 이루어져, 1621년 700여 개 독점(벽돌, 쇠, 석탄, 비누, 섬유, 가죽, 현대, 단추, 옷핀, 버터와 포도, 청어, 연어, 가재, 펜, 종이 등 포함)이 존재하였다. (p. 275 참조)

10) Acemoglu 등(2012) p. 276

11) 1769년 토머스 뉴커먼 Thomas Newcomen이 1705년식 증기기관을 개량하여 실용화, 제임스 하그리부스 James Hargreaves가 1764년 방적기 발명, 리처드 아크라이트 Richard Arkwright가 1769년에 방적기를 특허, 조사이아 웨지우드 Josiah Wedgwood 1769년에 에트루리아 도기, 1776년에 제임스 와트 James Watt 증기기관을 대폭 개선, 에드먼드 카트라이트 Edmund Cartwright 1784년 기계식 방직기 발명

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 이후 소지주와 신흥상공인들이 성장하여 의회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왕권 견제의 권력분립을 성공시킨 영국 명예혁명은 사유재산제도 확립, 왕실의 독점 완화, 금융업의 발달 등 상공인 즉 부르주아 주도의 사회로 가는 길을 열었다. 거기에 과학혁명이 불붙기 시작했고 인클로저 운동 등으로 농노들이 노동자로 변할 수 있어 공장제 산업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미국>

미국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와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이들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 자유, 행복추구 등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과 3권분립 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유기업 활동을 보장받고 근대 산업화를 이끌었다. 영국에서 방직기 증기기관 등 기술혁명이 전파되고 여기에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혁명이 잇따랐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독립 후 19세기 전반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증기기관 도입과 개량으로 공장과 교통 수단의 혁신이 시작되었고 뉴욕과 5대호를 잇는 에리 운하와 중서부로 나아가는 철도 건설과 전선(1844)의 도입으로 물류와 교통 건설이 활발하였다.

미국산업혁명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독점을 허용하는 특허제도가 1790년에 도입되어 그 후 수많은 발명과 기술혁신¹²⁾을 촉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링컨 대통령 시기 흑인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으로 평등이 실현¹³⁾되고 공업이 발달한 북부의 승리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1859년에는 록펠러가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타스빌에서 석유를 발견하여 석유 정제와 유통 혁신을 이루어 갔다. 철강 산업을 혁신하여 미국을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으로 만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는 1873년에 철강 산업을 시작했고,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1879년 세계 최초로 백열전구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로써 전기와 전구에 의한 전기화로 전신 전화 라디오 등 새로운 통신시대를 열었고 공장의 시스템화라는 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으며 사진 기술의 발명으로 영화산업도 시작되었다. 운송 수단인 자동차는 1903년 헨리 포드의 조립공정 도입으로 대량 생산 공장이 만들어졌다. 20세기 초반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으로 항공 산업까지 기술혁신이 이어졌다.

특히 남북전쟁 후 기회의 땅 서부 개척이 더욱 가속되고 철도건설과 석유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된다. 철도, 철강, 전기 통신, 석유, 자동차 산업 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덕분에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나와 산업인력

12) 1850년 특허건수 2,193건에서 1911년에는 67,370건으로 늘어났다.

13) 미국의 노예해방 선언으로 바로 평등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아서 영에 의하면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인종주의 차별주의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00명 혹은 500명 흑인이 고용되고 있는 대농장에서 한동안 신분차별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Acemoglu & Johnson(2023), p.132

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소득의 여유가 생기는 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아메리칸드림을 찾아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주요 산업에서 강도와 같은 기업결합과 독점이 큰 문제가 되어 1890년에 의회는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수립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1886년에는 미국 노동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이 설립되어 노동권의 신장을 위한 발판도 마련된다.

2. 유대인과 종교개혁파 들의 대규모 북유럽 이주

유럽의 근대인은 르네상스로부터 출현한다.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자유롭고 주체적인 르네상스인을 ‘근대유럽의 첫아이’라고 하였다.¹⁴⁾ 이들이 성장하여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과학혁명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주도하였다.

산업화 주체 세력의 등장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 중 하나는 스페인의 통일과 이교도 추방으로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의 이동이 있었고, 종교개혁과 반개혁의 변화를 겪은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와 스위스 영국 등으로 자유를 찾는 종교 개혁파들이 대규모 이동한 사실이 다. 이들 이주민이 자유주의를 확산하고 상공업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혼인하여 7세기 반에 걸친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1492년에 이슬람 왕국을 물리치고 이슬람 왕국 시절 경제권을 가지고 대접받던 유대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빈부와 귀천, 남녀노소, 거주 지역, 현지 출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떠나라”라는 알람브라 칙령을 내린다. 이때 스페인 내에 살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 중 10만여 명이 포르투갈을 거쳐 암스테르담, 스위스, 영국, 리투아니아 등으로 이주하였다.¹⁵⁾ 네덜란드로 간 이주민들은 보석상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네덜란드 이주민 중에는 스피노자와 같은 유대인 철학자 가문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 때인 1598년 낭트칙령으로 개신교 칼뱅파인 위그노(Huguenot)가 자유를 획득했다. 그러나 87년 후인 1685년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내려 낭트칙령을 폐지하여 버린다. 위그노 20-50만 명이 프랑스를 탈출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등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대부분 상인, 장인, 그리고 기사 들이었다. 스위스 시계공업 등 기계산업을 이들이 일으켰다. 이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상업, 무역, 제조업 등 산업화의 중심 세력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¹⁶⁾

14) Bruckhardt(1860)

15) 1492년 스페인 인구 700 만명 중 유태인과 개종자는 50만명 정도, 도시인구 중 1/3은 유대계

16) [네이버 지식백과] 위그노가 프랑스에서 달아나다 “....퐁텐블로 칙령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위그노는 프랑스를 떠날 수 없었지만, 20만 명에서 50만 명가량(전체 프로테스탄트의 반 정도였다)이 프랑스를 등지고 떠났다. 프랑스에서 솜씨 좋은 장인 가운데 위그노가 많았으며 실크 직조, 유리 제조, 가구 제조, 은 세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이 전문 기술을 지니고 떠났으므로 잉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프랑스와 상업적으로 경쟁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되었다. 프랑스로서는 큰

3. 시장경제 제도 출현

산업화는 시장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적 속박이나 봉건적 신분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공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시장이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은 일찍이 상공인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시장제도를 발달시켰다.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계약이 보장되면서 산업화가 활발해졌고 주식시장과 자본가가 출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였다. 이는 신분평등이 이루어진 독립된 근대 국가와 시장친화적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교과서적 시장경제는 유한한 자원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일을 권력자의 권위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거래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시장참여자들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이나 집단 등으로 권력의 간섭이나 영향이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중상주의 시대의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 경쟁집단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자유방임(leisure fair)의 시장을 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사유재산제도, 자유계약제도, 공정거래제도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대 산업화를 이끈 시장경제 제도의 기본 철학은 자유와 공정이며 최종목표는 소비자 후생이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자유롭게 거래를 하되 공정한 거래와 이에 따른 분배이어야 한다. 나의 자유가 인정되듯이 타인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 특히 나의 자유를 누리되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공정하다는 ‘자유원칙’ 혹은 ‘타자위해 원리’ (harm principl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¹⁷⁾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산업의 발전은 이윤 동기가 한 축이 된다. 수요만 있다면 기업의 생산이 뒤따른다. 기본수요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확대된다. 여기에 대서양 항해 시대에는 식민지 획득과 무역의 이익 등 해외수요가 발생했다. 원자재나 특산물 해외무역이 성행하게 되자 금융과 해운업 보험업도 발달하였다. 선박 기관 무기 등 생산도 필요하였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를 위한 철도 자동차 수요가 발생하였다. 도시 생활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수요도 증가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보듯이 특허제도가 생겨나자 전기 자동차 통신 등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자본축적도 늘어나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에 비해 국내시장이 협소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과일 생산을 해결하고 원자재 조달을 위해 해외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 전쟁도 일으켰다.

손해를 본 두뇌 유출 사건이었다.” 마이클 우드, 피터 피타도 편(2009),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참조

17) 강철규(2007)

4. 근대국가의 역할

이러한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 보장, 계약의 자유, 공정거래, 반독점 등의 제도들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만들어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대헌장 이후 오랫동안 왕권과 싸워 조금씩 견제와 균형 제도를 도입시킨 의회 제도의 발달과 이를 완성하는 1688년 명예혁명은 사유재산권 확립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 이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등 근대 최고의 발명품인 권력분립 제도가 자리 잡았고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독립과 더불어 제정된 헌법에 세계 최초로 세밀하게 담았다. 프랑스 대혁명 후 만들어진 나폴레옹 법은 근대 재산권 법을 집대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790년 특허제도와 1890년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대국가의 출현이 시장경제 제도와 산업화를 보증하고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

시장경제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근대국가가 건설되어 안정된 정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유와 관용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는 종교 개혁파와 자유로운 상공인들이 주역이 되어 올라너 빌럼 공이 이끄는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였다. 영국의 입헌군주제 확립과 미국의 독립정부 성립,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럽 확산은 근대국가와 시장의 상호보완 발전의 터전이 되었다.

5. 대외무역의 확장

지속적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생산확대를 위해 대외무역이 가능하였는지도 중요하다. 네덜란드나 영국 등은 자본주의 초기에 해외무역으로 큰 성과를 내었다. 특히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발견과 대서양 항로 개척과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가 개척된 후 대서양과 동서양 무역이 확대되었다. 인구 수백만의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시장이 작은 나라나 영국과 같은 섬나라의 경우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무역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해운업과 조선업 등이 일찍이 발전하였으며 해외식민지를 넓혀 수요를 확대하는 노력에서 앞서갔다. 해외무역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과 자본 거래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였다.

제1장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신분평등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이 등장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부와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다. 통일된 시장이 형성되어 확산하는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 계약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허제도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만들고 지탱해 줄 근대국가가 필요하였다. 또한 독재와 독점의 권력에 대항할 의회와 사법제도 같은 민주적 기구를 만들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지속 가능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는 해외시장 쟁탈을 위한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II. 후발국 일본-명치유신과 산업화

일본은 19세기 중반까지 봉건적 막부 체제하에서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1853년 페리 제독의 개항 요구 이후 그 충격으로 14년만에 명치 유신이 일어났다. 1866년 사카모도 료마(하급무사 출신) 등의 노력으로 성사된 사쓰마번과 죠슈번의 삿초동맹¹⁸⁾이 에도 도쿠가와 막부와 벌인 조슈전쟁에서 승리하자 1867년 대정봉환 즉 왕정복고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수백 년 지속된 봉건적 막부체제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 신분제 폐지령을 공포한다. 사무라이, 농민, 상인 등의 모든 신분은 평등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 후 20년간 연이은 개혁을 통하여 입헌군주제의 근대국가를 건설한다. 대정봉환으로 1869년 영주가 천왕에게 토지와 인민을 반납하는 판적봉환, 1871년 폐번치현, 1873년 지조개정, 1877년 서남전쟁¹⁹⁾, 1889년 헌법제정 그리고 다음 해 의회 발족 등으로 숨 가쁜 개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의 명치유신을 국제적으로 보면 산업화한 구미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에 후발국 일본이 끼어드는 국제 편입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과 산업화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존왕양이의 쇄국에서 무역개방의 문이 열려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명치 초기에는 부국강병을 내건 개발파(大久保伊通), 해외정벌을 도모하려는 외정파(西郷融盛), 공의여론을 수렴하려는 의회파(板垣退助), 내치 우선을 내세운 헌법파(木戶孝允) 등 4파가 존재하여 각 정파 밑에 결집한 찬동자들이 상황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유구조(柔構造) 개혁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였다.²⁰⁾ 이들의 주도로 1889년에 헌법 제정과 이듬해 의회 구성에 의한 중앙집권적 입헌군주국이 성립된다.

명치유신이 시작된 후 약 반세기 만에 정치적으로 근대국가로, 경제적으로 산업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큼 현란한 근대화가 진행된다.²¹⁾ 여기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자,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영일동맹을 업고 중국정벌에 참전한다. 그 덕에 무기 수출과 유럽의 대아시아 수출 공백을 메우는 공산품 수출 증가의 기회를 얻어 군국주의적 산업화가 가속된다.

신분 평등으로 자유 이동이 이루어지자, 경제적으로 전국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다. 정치는 왕이 등용한 유능한 인재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카모도 료마의 선종 8책

18) 삿초동맹은 일본 사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融盛)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敏道) 그리고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木戶隆義)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사이에 1866년 3월 7일 맺어진 정치적, 군사적 동맹으로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기 위한 동맹. 이 동맹을 통해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조슈번 출신의 이토 히로부미는 명치유신 후 일본의 초대 총리가 되었다. 이들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협력하여 명치유신을 추진하였고,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19) 사쓰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그 추종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명치유신의 개혁정책에 반대하고 전통적 사무라이 가치를 복원시키려 했으나 실패

20) 坂野潤治, 大野健一(2010), p.25

21) 坂野潤治, 大野健一(2010), p. 3

등이 주요하여 개혁 주체들에 의해 시장경제에 맞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진다. 개혁의 주체로는 1863년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 명치유신의 조슈 5걸²²⁾이라 불리는 영국 파견자들의 역할이 컸고, 대정봉환 이후인 1871년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러시아 등에 파견되었던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원들이 개혁의 실권자로 등장하였다. 이들을 비롯해 요시다 쇼인(吉田宋陰)의 쇼카손주쿠(쇼카무라학원) 출신 인물들은 근대 일본이 부국강병을 성공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등 서구 제도를 모방하여 제도개혁에 앞장서고 서구의 산업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산업화에 앞선 구미 열강과 마찬가지로 해외정벌로 나아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공략하기도 하였다.²³⁾

명치유신 이전의 도쿠가와 정권 260년간 외부 접촉을 제한하였어도 내부적으로 정치적 통일, 물류시스템 발전과 전국 통일시장 형성, 상업 금융의 발전과 그에 동반하여 부유한 상인층 대두 등의 근대화 7조건²⁴⁾이 성숙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는 1860년대 사카모도 료마 등이 세운 가베야마사추(龜山社中)라는 해운회사가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일 정도로 아직 미미하였다. 미쓰비시 상사의 창립자 이와사키야타로 (岩崎弥太郎)도 이 시기 방물장수였다.

유신 전후 산업화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페리호 등장 후 메이지 유신 시작 전인 1860년대 중반까지의 1단계는 국방과 방어 목적의 제철과 조선업 등의 시험 시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메이지 유신을 촉발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입헌 군주제를 완성한 유신시대의 제2단계에는 정부 주도로 서양의 기술과 과학지식을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저부가가치의 섬유산업 등이 산업화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명치유신 후 신분제 폐지로 예비 산업인력이 증가한 가운데 안정된 입헌군주정 속에서 식산흥업을 내세우는 오쿠보 등 부국강병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주도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기술도입형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전화, 우편, 철도와 조선 등의 선진 기술과 지식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렇게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부가 공영기업으로 육성한 다음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한다. 동업자 조직을 폐지하는 등의 근대 산업 육성에 방해되는 봉건적 제도를 제거했다. 일본 정부가 구미의 기술자나 학자 등을 고용하여 기술 습득에 적극 나선 것이 식산흥업 정책에 크게 공헌하였다. 연인원으로 3000명 정도의

22) 조슈5걸의 밀항: 1863년 6.27 이토 히로부미, 야마오 요조(産尾庸三),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엔도 기스케(遠藤謹助), 이노우에 마사로(井上勝)가 요코하마에서 영국 화륜선에 올랐다. 이들은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로 런던 칼리지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2차 시모노세키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하고 급거 귀국한다. 귀국 도중 64년 8월 조슈번 전쟁은 터졌고 조슈번은 참패하였다. 박종인, pp.274-275

23) 이노우에 가오루는 청일전쟁과 민비시해사건 때 조선공사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청일전쟁당시 조선주둔군 사령관,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이었다고 을사늑약 시 당사자였다. 가쓰라 다로는 (계태량)은 을사늑약 당시 총리였다. 가쓰라는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함께 필리핀과 조선을 서로에게 양보하는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은 인물이다. 박종인, p. 276

24) 坂野潤治, 大野健一(2010), p. 180; 내적 발전을 양성하고 있었던 근대화의 7조건

1. 정치적 통일과 안정, 2. 경작면적과 생산성 면에서 농업의 발전, 3. 물류시스템의 발전과 전국통일 시장의 형성, 4. 상업 금융의 발전과 그에 동반하는 부유한 상인층의 대두, 5. 수공업의 발달, 6. 지방정치에 의한 산업진흥, 7. 교육의 보급 (pp.180-181)

외국인이 고용 되었다. 메이지 9년(1876년)에는 500명 이상의 기술자가 일본을 방문했다. 높은 급료를 지불하여 인재를 초빙한 덕분이었다.²⁵⁾

1882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설립되고 1880년대 전반 대장 대신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가 실시한 디플레이션 정책은 소농의 몰락과 부농 등장, 그리고 기업설립의 붐을 일으켰다. 이들 부농이나 부유한 도시 상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속속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여 메이지 19년(1886년)부터 3년간은 회사 설립 붐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으로 일본군 서울 주둔을 허용한 한성조약(1885)이 맺어진 후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제3단계는 1890-1910년 대로 습득한 기술을 일본 각지로 토착화한 시기였다. 식산흥업 정책의 일환으로 메이지 1877년에 우에노 공원에서 농업, 원예, 기계 등 6개 분야의 첫 번째 박람회²⁶⁾가 개최되었고 그후 1903까지 박람회는 4차례 더 개최되었다. 서양 기술을 일본 각 지방의 필요와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나간 시기이다.²⁷⁾

메이지 유신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경공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이렇듯 일본의 산업화가 순항한 것은 선진산업국의 경험과 국제분업 원리를 잘 이용한 덕분이었다. 영국에서 발달한 경공업이 19세기 중후반부터 독일과 미국으로 전파되고 영국은 금융과 해운업 보험업 등을 발전시켜 나아간 것처럼 일본도 명치유신 이후 산업화 초기에 도입 기술과 저임금을 활용한 방적업 제사업 등 섬유산업에 주력하였다. 일본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 섬유산업은 주요 수출산업이 되었다. 민간기업 오사카 방적회사는 당시 최신 영국제 물 방적기를 도입해 증기기관에 의해 기계를 움직이는 대규모 공장제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많은 방적회사와 제사회사가 등장하여 저렴하게 면사와 생사를 대량 생산하고 대량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마쓰카타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몰락한 농민의 자녀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시켰다. 마치 엔클로저 운동으로 영국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고용된 것과 유사하다. 기술인재는 초기에는 기술과 더불어 고임금 기술자를 해외로부터 영입하였으나 점차 제국대학을 설립하여 자국의 고급인재 양성으로 나아갔다.

군사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수입하고 해군 훈련소를 설립했다. 일본 제국의 해군은 1869년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었고 프랑스와 영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요코스카와 나가사키에 현대식 조선소를 건설하여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1895년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세계 1차대전은 일본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쟁특수를 얻게 해주었다. 일찍이 영일동맹을 맺어 아시아지역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된 일본은 1915년 위안스카이(원세개)에게 산둥성에서 독일이 누리던 권익을 일본이 계승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순

25) 예를 들어 토마스 킨더라는 고용 외국인에게는 정부의 고위직 태정대신 산조 사토미의 800엔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하였다. 河合 敦(1919), 明治日本の産業革命.

26) 1회때 84000점의 상품이 출품되었으며 102일간 45만 명이 참관하였다

27)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2015) 참조. “유산을 구성하는 23개의 요소는 8개 지역 11곳에 분포하고 있다. 8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일본 남서부에 있고, 1개의 지역은 중부, 마지막 1개는 본섬의 북부에 있다.” © Izunokuni City / Aerial view of Nirayama reverberatory furnaces

과 대련 등 남만주 철도조차기간을 99년간 연장, 제철소와 광산, 탄광 등 공동경영, 중국 정부 정치 재정 군사에 대한 일본 고문 초청, 중국 경찰 공동 운영 등 21개 조항을 요구하고 중국의 독일 조차지 청도를 공격 점령하였다. 그 후 만주 지역뿐 아니라 소련의 연해주, 남양군도 공격 등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감소된 유럽의 군수품과 원자재생산을 대체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으며 유럽의 선박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해운업과 조선업이 급성장하였다. 아울러 전쟁으로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되어 생사 수출이 늘어나고 양잠업이 특수를 누렸다. 전쟁특수로 급속히 자본축적을 한 일본산업은 전후에는 주기적으로 과잉 생산과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영토확장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과욕을 부리다가 패망하고 만다.

<I-II장 주요국의 근대 산업화 요약>

위의 제I장 및 제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산업화 선진사례는 몇 가지 필수조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였다. 무엇보다도 산업화를 담당할 주체인 상공인 세력이 등장하였는가 중요하다. 선진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산업화 초기의 중요한 조건은 크게 보아 3가지를 들 수 있다. 신분평등의 실현, 독립된 근대 국가의 존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제도 도입 등이다.

신분평등의 실현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삶을 추구할 기회와 인센티브의 동기부여가 생겨날 때 사회발전 에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부를 추구하여 부자가 될 수 있거나 사회적 신분계급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완전한 신분평등이 아니라도 신분이동의 길이 열리면 시민의 에너지와 열정이 생성하고 증가한다. 봉건국가의 신분제하에서 다수를 점하는 낮은 신분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활동이 제약되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봉건적 신분제 해체가 상공인의 등장과 증가에 필수적이다. (다만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었다 해도 식민지배와 같은 이유로 자주성을 상실하면 기본권이 규제되어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 활성화에 실패할 수 있다.)

독립된 근대국가는 국민에게 생명과 안전, 자유, 평등 등 천부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좋은 삶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회와 인센티브 추구라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독립된 근대 국가의 형성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전제정, 군주정, 공화정 중에서 경제활동의 자유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경우는 공화정이었다. 현실적으로 자유권이 보장되려면 국가의 법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몽테스키외의 명저 <법의 정신>의 핵심 주제는 자유와 권력분립이다. 3권분립과 같이 권력분립의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자유권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자유는 전제정에서는 불가능하고 군주제와 공화정에서는 가능

하나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²⁸⁾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생산 분배 소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계약과 자유 거래의 시장이 존재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과 소비자의 소비 행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 처분 매매 등을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권과 재산권이 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공정거래 제도도 산업화에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같이 오랫동안 왕권과 대립하였던 의회 내에 점차 상공인 소지주 지역대표 등이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활동과 권익을 위한 권력분립 투쟁을 통해 시장제도와 사법제도를 얻어내어 산업화를 성공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해외무역으로 부유해진 주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과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페인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유와 관용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네덜란드도 있었다. 종교적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미국인들이 유럽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생명, 자유 등 기본권 보장과 입법 사법 행정 등 권력분립을 헌법에 명시하여 근대 국가를 세우고 산업화를 이룬 경우, 그리고 후발국 일본에서와 같이 개화파 유신 세력이 봉건 막부를 무너트리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여 신분평등을 이룩하고 기술도입과 식산흥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를 이룬 경우도 있다. 세계 제2차대전 후 개발도상국 중에는 싱가포르의 이관휴와 같이 반부패기구인 탐오조사국을 독립시켜 부패를 청산하면서 산업화의 에너지를 끌어낸 예도 있다.

<표2> 주요국의 근대 상공인 등장의 역사적 배경

독립국가 건설-평등실현(기회와 인센티브로 동기부여)-기업제도, 주식시장제도 등 도입

	신분평등	독립국가 형성	시장제도 등	기타
네덜란드	자유민의 해상무역, 종교적 속박 과도한 조세부과에 저항	종교개혁 독립전쟁 관용과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 건설	기업제도 주식시장	해운업 금융업 조선업 모직
영국	마그나 카르터의 liberty, 수도원 재산, 공유지 매각으로 소지주 형성 왕권과 의회간의 오	헨리8세 종교 개혁 명예혁명으로 권력분립	수도원 교회자산(전 토지의 1/4)몰수 매각 사유재산제도 반독점법	영란은행 증기기관, 방적방직기 발명, 공장제 제조업 등장

28) Montesquieu 몽테스키외(1749), P.133

	랜대립속에서 상공 인 시민 권익 향상, 일찌기 의회 성립 권리청원, 권리장전		특허법, 법관임 명의 의회동의	
미국	종교의 자유 찾아 이주 생명, 자유, 평등 행 복권 보장하는 독립 선언서 노예해방 위한 남북 전쟁	독립전쟁 국민의 기본권과 3권분립 명시 한 헌법 제정 의회 민주주의 실현	특허법 반독점 서면법	철도, 석유, 철강, 전기, 전신 전화, 자동차 산업
일본	명치유신: 존왕양이 ->외국문물 도입, 신분제 폐지령 정부주도 산업화 헌법제정으로 평등 실현	대정봉환 막부체제에서 입헌군주국 조선 중국 등 해외침략	폐번치현 판적봉환 외국기술도입, 외국기술자 고액 고용(3천여명) 식산흥업	정부주도로 철도, 통신, 조선 등 인프라 구축, 방적업, 해운, 조선, 무기

III. 조선시대 산업화의 초기 조건들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

조선의 경우 위의 I-II장의 선진국 사례와 비견되는 산업화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신분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어 계급이 타파되고 자유로운 산업화 세력이 생성된 일이 있었나, 이에 우호적이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서 생명, 자유 등 기본권과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고 가격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제도가 생겨났는가, 그리고 대외 개방을 하여 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등을 살펴보자. 조선은 19세기 중반까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필수산업으로 옹호하고 공인과 상인을 경시하는 사농공상의 신분제를 고수하다가 1876년 운양호 사건으로 맺은 강화도조약에 의해 강제 개항이후 변화를 겪게 된다. 1884년 갑신정변에 이어 사민평등과 토지균분제를 주장한 농민혁명 그리고 갑오경장 등 개혁추진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봉건왕조의 무능과 탄압, 그리고 외세의 개입으로 그러한 노력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여기 III장에서는 강제 개항을 가져온 강화도조약 이전까지를 살펴보고 그 이후는 다음 IV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산업화 추진 주체의 부재

조선은 518년 동안 양반, 중인, 상민, 노비로 나누어진 엄격한 신분사회였다. 법적으로는 양천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로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사람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였다. 양인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고 세금납부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천인은 주로 노비로 구성되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거의 없었다. 사회적으로 운영된 실제 신분제는 반상제였다. 신분에 따라 각각 맡아야 할 직업이 따로 있었다. 양반은 지배계급으로 주자 성리학을 공부하며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직에 나아간다. 이들이 사대부이다. 모든 사대부는 상공업의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고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에 몰두하였다. 양반과 상민 사이에 하급 관리나 의관, 역관 등으로 일하는 전문인 중인이 있었고 상민은 생산직인 농업, 상업, 공업에 종사한다.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사대부 양반들의 고상한 일에 경제자원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중요 산업 분야였다. 상민 중 대부분(거의 90%)은 이들 농민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공업은 천한 직업 분야로 여겼다.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하는 공인, 이를 거래시키는 상인들은 사치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하여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노비들은 가내노비와 외거노비가 있었고 이들은 자유가 없는 재산으로 취급 되었다.

이러한 신분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다소 혼란스러워졌다. 고갈된 정부재정을 보충하고자 기부를 받고 신분을 높여 관직을 주는 공명첩이나 천민을 양인신분으로 이동시키는 면천첩을 발행한 일이 있었다. 일부 부유해진 상민 중에서 양반의 족보를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 결과 조선 초기 10%대에 머물렀던 양반의 숫자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30%까지 늘어나는 등 상민과 노비는 줄고 양반은 늘어나는 사회적 신분의 인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²⁹⁾ 19세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급속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상의 구분이나 사농공상이라는 직업구분과 차별은 변함이 없었다. 일을 하는 생산직이 늘어나거나 사회적 신분차별의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기존체제 내에서 양반의 혜택을 받으려는 양반의 수가 늘어난 것이었다. 돈을 주고 군역 면제와 조세혜택 등 양반의 특권을 얻어 양반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신분평등을 바탕으로 기업설립, 공장건설 등의 제조업을 일으

29) 17-19세기 대구 지역 신분별 인구구성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것은 제1기(1690년), 제2기(1729년과 1732년), 제3기(1783년과 1786년, 1789년), 제4기(1858년)에 조사된 통계로 양반의 비중이 3기에는 37.5%, 4기인 19세기 중엽에는 70% 이상으로 크게 늘어 난다. 자료: [역사 속 통계 8] 통계로 보는 조선의 신분제 - 양반통계, 조선후기 신분통계, 양반통계, 통계청공식 블로그, 2012. 11. 8.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합계	
	호수	%	호수	%	호수	%	호수	%
1690	290	9.2	1694	53.7	1172	37.1	3156	100
1729, 1732	579	18.7	1689	54.6	824	26.6	3092	100
1783, 86, 89	1055	37.5	1616	57.5	140	5.0	2810	100
1858	2099	70.3	842	28.2	44	1.5	2985	100

키거나 사유재산제도나 자유계약 등을 요구하고 실현하려는 상공인 세력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엄격한 신분제하에서는 공업과 상업을 이끌 동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시장경제가 발달할 수 없었다.

일하지 않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인식하고 생산직의 중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후반 활동하였던 실학파 초정 박제가의 그의 저서 <북학의> 등을 통해 사족 즉 양반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양반도 일을 하여 농공상이라는 생산직, 특히 그중에서도 상업종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목청 높여 주장하였다.

“무릇 놀고먹는 자는 나라의 큰 짐입니다. 놀고먹는 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은 사족(士族)이 나날이 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가 거의 온 나라에 퍼져 있으니 한 가닥의 벼슬만으로 이들을 다 옹아낼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무릇 수륙으로 교통하여 무역과 판매하는 일을 사족에게 허락하여 호적에 올릴 것을 신은 청합니다.”³⁰⁾

“상인이 4 민중 하나인데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즉 사농공)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10분의 3의 비중은 되어야 한다.”³¹⁾

늘어나는 사족에게 무역과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혁하자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양반과 상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종사자를 빼고 나면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상공업 종사자 수는 매우 적었다. 이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분제도가 개혁되어야 했다. 조선 518년 동안 사농공상의 직업별 신분 구분을 엄격히 한 신분 계급제는 변하지 않았다.

조선 초기 정도전 등이 앞장서 주장한 이성계의 토지개혁이 있었다. 고려의 권문세가 영주들의 토지 겸병으로 농노신분으로 떨어져 전호가 되었던 과거 농민들을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 놓은 것으로 당시 역사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평등을 이룬 것은 아니었고 더구나 상공인이 이끄는 산업화와는 무관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양반 수가 늘어나는 혼란한 사회경제 속에서 왕과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4대 한국에서 보듯이 예송논쟁 등 성리학 해석 문제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한 세기 이상을 보냈다. 신분제도 개선이나 산업 발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신분 평등 혹은 신분이동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파에 따라 토지와 노비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였다. 성호 이익(1681-1763)의 산문집 성호사설의 봉당론에 의하면 당쟁의 원인을 이해타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무릇 이(利)가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면 당이 둘이 되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 되면 당이 넷이 되는 것이니, 이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십봉팔당으로 가지가 많아지는 법이다.”³²⁾

30) 이는 1786년 대소 신료들의 생각을 임금에게 올리라는 명을 받고 초정이 소회를 밝힌 내용 중 일부이다. 丙午正月二十二日 早參時 典設署別提 朴齊家 所懷, 박제가 <북학의> 외편

31) 박제가 <북학의> 시정편

그가 말하는 이(利)는 관작과 토지와 노비였다. 이러한 이는 변함이 없는데 이를 차지하려는 양반 수는 급증하므로 10봉8당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심한 투쟁이 벌어진다. 이 투쟁에서 봉건적 신분제를 개혁하여 상공인의 신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여 상공업을 일으키자는 신분제도 개혁 논의는 전혀 없었다. 즉 기존의 신분제는 건드리지 않았고 다만 양반이 거느리는 재산 토지와 노비의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의 싸움으로 허구한 날 다투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비제는 자주 바뀌었다. 부계를 따르는 종부법에서 모계를 따르는 종모법으로 다시 종부법으로 순환 개정하다가 1751년에 최종적으로 모계를 따르는 종모법으로 확정하여 이후 그 정책을 따랐다. 이는 노비제를 폐지하여 신분 평등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재산인 노비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늘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양반들의 이익과 노비를 줄이고 상민 수를 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왕조)가 타협한 것이었다. 왕조가 진정으로 세수를 늘이고 국부를 증가시키려고 했다면 상공인을 우대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신분제도 개혁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러한 반봉건적 신분제 개혁은 없었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 등 신분제 자체는 조선 내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노비 수는 1801년에 관노제를 폐지한 후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산업화를 담당할 자유로운 상공인 계급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과연 자유롭고 주체적인 근대인이 등장하여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산업화가 가능하였을까? 제도가 그러하니 근대적 상공업 발달의 동기부여가 없었고 부의 생산과 축적에 열정을 가진 상공인 세력의 형성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지배세력의 산업관-농자천하지대본 무본억말 흥리제해

산업화를 방해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양반이라는 지배계급의 산업관이 상공업 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왕조는 개국 이후 상업을 병리학적인 이상 현상으로 취급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은 성리학이 추구하는 도덕 사회에 악이라는 논리다.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도덕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농부는 학문하는 선비를 뒷받침하므로 가장 중요한 직업인이다. 공인은 생활에 필요한 기물을 생산하는 천민이다. 상인은 사치를 부르는 천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³²⁾

이러한 사고는 조선의 선비들이 믿었던 주자 성리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농자천

32) 이익(1999), 성호사설 인사문 제1편. 인사문에는 정치와 제도, 사회와 경제, 학문과 사상, 인물과 사건 등을 서술한 990항목 중 봉당론은 인사문 제1편으로 수록

33) 박종인(2019), P.241

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업중시의 중세적 산업관과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나온 것이었다. 농업을 산업의 대본으로 여긴 것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고상한 사대부의 일을 돕는 물질적 기반이 농업이라는 인식의 산물이다. 여기에 무본억말 흥리제해(務本抑末 興利除害)³⁴라는 정책집행을 위한 행동철학이 덧붙었다. 즉 대본인 농사에 힘쓰고 사치를 조장하는 상업과 기교를 부리는 공업을 억제하는 것이 성리학 추구에 이익된 일은 일으키고 해로운 일은 억제하여야 한다는 사고다. 따라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홀대하는 신분제가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산업관은 당파와 관계없이 모든 사대부의 도덕관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영국은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소지주와 상공인이 주류를 이루는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는 권력분립에 성공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산업활동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확고히 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촉진 시켰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680년 조선에서는 주자 성리학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사대부들의 권력 투쟁인 경신대출척³⁵이 일어났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 노론당이 권력을 잡는다. 이때 눈에 가시와 같던 남인의 거두 윤희를 대학 중용 효경 등의 주자 성리학의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설파한다고 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배척하면서 사사하였다. 사문난적이란 고려 말기부터 주자의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연구하는 자를 비판할 때 사용된 말이 있으나, 조선 중기부터 같은 성리학이라 해도 서인의 교조적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반대파를 비판하고 권력에서 축출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왕도 사문난적이 거론되면 국기를 흔드는 중죄라 여기곤 하였다. 이로부터 서인의 사문난적이라는 배타적 성리학 교조주의와 그 물질적 기반인 농자천하지대본의 산업관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흔들림 없이 연계되어 조선 정치의 사고를 지배하였다. 영국처럼 상공인들이 성장하여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 등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형편이 아니었다. 사회구성원들의 에너지가 영국에서는 상공인이 주류를 이룬 의회와 왕 간의 권력분립 투쟁에

34)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1월 1일 1783년. 도백·유수·수령에게 농사를 권장하여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하다. 務本抑末, 興利除害, 使我稼穡之民, 共享豐登之樂, 方岳之任也. 무본억말(務本抑末): 본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부차적인 것을 억제한다는 뜻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하고 흥리제해(興利除害)는 이익을 증진시키고 해로운 것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사치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정책을 의미. 이 문구는 조선시대 정조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며,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상업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조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35) 1차 예송논쟁(1659 기해예송)으로 서인 우세로, 2차 예송논쟁(1674 갑인예송)으로 남인 우세의 봉당 정치가 지속되다가 경신환국(1680)으로 서인인 노론 일당의 체제로 바뀐다. '경신대출척' 또는 경신환국은 오랫동안 다투어 오던 남인인 윤희를 숙종이 사문난적의 혐의로 처형하자 순식간에 남인 정권이 역모로 무너지고 서인이 대거 등용된 사건이다. 그 후 영정조 시기 탕평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조선 말기까지 노론당의 지배가 지속된다. "윤희는 종래 주자의 해석방법을 배격하고 <중용> <대학> <효경> 등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장구(章句)와 주(註)를 수정, 당시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송시열은 처음에 윤희의 의견을 이설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희는 주자의 해석을 그르다 하고, 장구를 멋대로 고쳤다. 심지어 "경전의 깊은 뜻을 어찌 주자만 알고 우리는 모른단 말인가?"라는 말로 주자의 아성에 도전하는 듯한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과격하다고 본 송시열은 그를 설득하게 된다. 송시열은 윤희를 직접 찾아가 설득해 보고, 편지로 달래 보기도 했으나 허사였다. 우암은 격분한 나머지 백호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며 규탄했다.", 위키백과 윤희 참조

사용되는데 반해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사대부들의 사문난적과 같은 교리논쟁의 권력투쟁에 주로 사용되었음이 비교가 된다.

상공업을 천시하는 산업관은 나아가 사대부들에게 사치를 배격하고 근검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까지 심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실학파 초정 박제가가 <북학의> 시정(市井)편에서 검소가 미덕이 아니라 궁핍의 원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비와 생산의 원리를 밝히는 유명한 ‘우물론’을 다음과 같이 펼쳤다.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 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 탓에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 나라 안에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저자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과 엿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참으로 검소한 풍속 때문일까? 아니다. 그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하여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물은 퍼내 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 여성의 기술이 피폐해졌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장인과 도공, 풀무장이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하여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³⁶⁾

조선 5세기 동안 지속된 검소가 미덕이고 사치는 악덕이라는 사대부들의 편견과 반산업적 인식을 경제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한 글이다. 물건을 소비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궁핍해진다. 재화는 우물과 같아서 계속 소비해야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잡한 그릇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를 추구하는 상업을 박대해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상공업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경제가 피폐해졌다고 정확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봉당정치와 네 번의 환국이 있었지만 사대부가 지배하는 조선에서 상공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상공업자들이 스스로 세력을 키워 자신들의 자유와 권익을 주장할 힘이 없었다. 아직 신분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제가의 검소함에 대한 비판과 생산 및 소비의 원리인 ‘우물론’의 훌륭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95년 광주 관요에서 ‘기묘하게 기교를 부려 제작한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감사 보고서가 올라오자, 조선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정조는 이렇게 명했다.

36) 박제가(1778), <北學議>, 이익성 역 pp. 121-122

“쓸데없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일절 만들지 말도록 엄금하라”³⁷⁾

조선 후기 영조 정조가 성군이었을지 모르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군주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분역말로 굵어 죽은 도공들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도공 중 일부가 조선에 다시 나와 천대받는 도공들을 모아 대접받는 일본으로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으로 간 이작광은 조선으로 돌아와 동생 이경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아리타(사가현)로 끌려갔던 조계는 그의 제자들을 데려갔다.³⁸⁾

결론적으로 잘못된 성리학적 직업윤리 의식이 지배한 조선 사회에서 신분제의 변화가 없었으며 그 결과 상공업의 발달을 주도할 상공인 세력이 등장하지 못했다. 국력을 일으킬 좋은 에너지 E1³⁹⁾의 창출이 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적 도덕 사회 추구로 사농공상의 신분적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더구나 에너지 생성을 억누르는 무분역말과 흥리제해의 잘못된 정책을 구사하여 상공업과 상공인 세력의 등장을 억제하는 모델이었다.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아가게 할 좋은 에너지 E1의 생성을 촉진하는 사고와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반대로 이를 억제하고 고착시키는 성리학 교조주의의 잘못된 행동철학이 지배함으로써 산업화가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양반 지배의 정부가 산업화에 필요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개혁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3. 시장경제의 수준

조선시대 시장경제가 존재했나? 물론 전통시장은 어느 사회나 존재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는 근대 산업화 사회에 걸맞은 근대적 시장이 존재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앞에서 보았듯이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 및 공정거래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 발전한다. 더 나아가 기업 제도, 주식시장 등의 제도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 제도는 이를 만들고 보호하는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상공인 세력이 주도하든가 이들에 우호적이어야 한다. 공장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도 발달하여야 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허생전⁴⁰⁾은 18세기 당시 시장경제의 상황을 엿보는

37) 정조실록 1795. 8. 6, 박종인(2019),p.241에서 재인용

38) 박종인(2019), p. 248

39) 문화는 에너지 E와 기술 T의 함수. 에너지를 키우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문화는 확충된다는 White equation: $C=E \times T$ 를 응용하여 인간존중의 가치실현 문화(Cv)를 정의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에너지를 E1, 기술을 T1이라하면 인간존중의 가치실현 문화는 $Cv=E1 \times T1$ 이 된다. E1이 증가하면 문화발전 즉 Cv는 확장한다. 인간존중의 가치란 생명, 자유 등 인류의 천부적 기본권과 좋은 사회생활을 위한 신뢰 그리고 이를 지속시키는 환경보전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 가치외에도 인간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 공정, 평등, 경제성장 등 보완적 가치들도 있다. 졸고(2023) 참조

데 도움이 된다. <열하일기>의 옥갑야화에 실려있는 허생전 전반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성에서 대추 감 밤 배 감자 석류 굴 유자 등의 과일을 모두 2배 값으로 구입하여 도고하자, 제주 과일의 가격이 10배로 급등하여 전부 팔아 이익을 남겼다. ‘어허 겨우 만금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얇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는, 곧 칼 호미 베 명주 솜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거두면서, ‘며칠만 있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지 못할 거야.’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탕건값이 과연 10배나 올랐다.”⁴¹⁾

“그리하여 물의 산물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물에서 나온 고기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의약의 재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그 한 가지의 물건은 한 곳에 갇히매 모든 장사치의 손 속이 타 마르는 법이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 뒷 세상에 나라 일을 맡은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걸세.”⁴²⁾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시장경제에서 발생하기 쉬운 독과점의 폐해도 잘 말해 주고 있다. 조선에 전통시장은 존재하고 있었다. 대추 감 배 등 과일이나 해산물, 칼, 호미, 베, 명주, 솜 등과 양반들이 사용하는 필수품 탕건을 만드는 말총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아직 근대적 시장경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자본가의 투자로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섬유, 식품, 기계, 전자 제품 등 각종 공산품을 생산하는 체제는 엿볼 수 없다. 수공업적으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여 거래하는 전통시장 체제로 볼 수 있다.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산품의 비중도 한자리수 미만이었을 것이다. 소설은 몇 가지 농산물이나 해산물 생활필수품을 매점 매석하면 가격이 올라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전통시장에서도 그러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다만 ‘뒷 세상에’ 이런 방법을 쓰면 나라가 병들고 망한다 라고 경고하였다. 즉 시장경제가 발달한 후에 이런 방법을 쓰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경고한 셈이다.

시장을 향해 생산물을 쏟아내는 근대적 공장제 기업이 공급자로 등장해서 중심이 된 시장경제의 모습은 아니다. 공장제 기업, 주식회사 제도, 사유재산제도, 계약의 자유, 공정거래 등 시장경제의 기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공장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다. 이러한 제도는 발달한 상공인 계급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자본가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왕과 양반의 지배계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공업을 천한 직업으로 낙인찍고 있던 사회였을 뿐이다.

40)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II>(1968), 옥갑야화-허생전

41) 박지원(1968), p. 300

42) 박지원(1968), pp. 305-306

4. 정부역할 부재 및 해외무역 금지

조선사회 지배계급이었던 왕과 양반은 ‘농자천하지대본 무본역말’이라는 이념을 공유하면서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공업을 천시하였다. 사농공상의 신분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 즉 근대인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근대적 시민의 주장이 반영되는 근대적 국가도 출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장제도를 만들고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도 없었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나 자유계약 및 공정거래 제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주식회사, 금융회사 등 기업 관련 법 제도도 아예 없었다. 중앙집권적 군주제가 지속되는 동안 그러한 변화의 동인도 없었다.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기본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군주제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동학혁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군국기무처의 갑오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1894년 10월 7일(양력11.4) 일본 쇼수 5결중 하나였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신임 일본특별전권공사가 고종과 민비를 면담했을 때 다음 대화를 보면 명확하다.

“이때 이노우에가 군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군주가 백성을,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여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라며 입헌군주제를 납득하지 않았다.”⁴³⁾

근대적 국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왕에 의한 전제정 국가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주장대로 전제정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자유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이에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려는 자본가 계급이 등장할 리 없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유로운 공장 노동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 품삯과 숙식을 제공받는 머슴과 일부 공장 노동자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조선 500년 동안 공업인구나 상업 인구가 농업인구를 초과한 일도 없었다.

대외적으로 해외무역이 열렸으면 산업화된 외국 상품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마저 금지되었다. 이 점도 산업화를 제약한 요인의 하나였다. 1876년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열리고 일본 상인들의 조선 진출이 허용되긴 하였으나 해외무역이 전면적으로 풀린 것은 아니었다.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조공무역을 제외하곤 외국무역은 열리지 않다가 개항 이후 일본의 필요에 따라 주로 일본과의 무역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미 초정 박제가가 해외무역

43) 박진철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종의 왕권강화책 연구, 박종인, 대한민국 징비록 p.216 에서 재 인용

의 필요성을,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세기에 외국 선박이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여도 위정척사론을 내세워 사악한 외국인과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물자를 원천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하였다.

조정 박제가는 대외자유무역을 금지하고 있던 조선에서 <통강남절강상박의>, <임금께 올리는 소회(1786년)> 등을 통하여 당시 금지하고 있던 대외무역을 적극 주장하였다. <북학의> 재부론에서 다음과 같은 시⁴⁴⁾로 그의 생각을 펼쳤다.

신라란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
그 면적 현재 우리나라 8분지 1일세
고구려는 위쪽에서 침노하고
당나라 군사 아래에서 출병했네
창고에 곡식이 스스로 넉넉하여
군량미를 잘 대주어 실책 없었지
그 까닭 자세히 연구하니
배와 수레 이용한 까닭일세.
배로는 외국과 통상할 수 있고
수레는 말과 나귀 편하게 하네.
이 두 가지 방법 쓰지 않으면
관중 안영이라도 소용없네.

배를 지어 외국과 통상하지 않으면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신라가 번영했던 이유 중 하나도 무역을 한 것에서 찾고 있다.

<통강남절강상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과 무역을 주장하였다. 단계적으로 세계 무역으로 확대하자고 하였다. 무역을 해야 물산이 풍부해져, 개방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일본 통신사가 전하는 일본의 문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개방과 무역의 덕이라고 하였다. 신라, 고려가 잘 산 이유를 무역과 개방에 있다고 하였다. <북학의>에는 무역을 위해 배와 수레의 이익을 설명하는 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확장되면 증기기관 기술이나 조선과 해운 기술 및 육지와 해양에서 운송 기술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병오년 정월에 올린 소회>에서도 정조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다. “가진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없는 것을 얻고자 무역하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입니다. 일본과 유구, 안남, 서양의 무리가 모두 민, 절강, 교주, 광주 등지에서 교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뱃길을 통하여 상인들이 통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⁴⁵⁾ 그러나 국내 특산물의 교환으로 무역의 이익을 얻고자 한 이

44) 新羅處海濱，八分今之一。句麗方左侵，唐師有右出。倉庾自有餘，稿饋禮無失。細究此何故，其用在舟車。舟能通外國，車以便馬驢。二者不可復，官晏將何如。

45) 안대희 감역(2013), 완역 정본 북학의, p. 275

건의도 건의로 그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세기 들어서도 외국의 통상 요구를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위정척사론에 압도되어 무역을 용인하지 않았다.

5. 실학파 박제가의 신분제 개혁 주장과 한계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상공인 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그것은 엄격한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어 신분평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르네상스에서 보듯이 상공인 예술가 등이 모이는 자유도시가 출현하고 상공인들에 의한 자치도시 운영이 이루어지며 도시의 맹주로 메디치가와 같은 금융인이 이를 적극 지원한 환경 속에서 역사를 바꾼 근대인이 출현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관용과 자유를 바라는 종교 개혁파들과 해상무역 업자 등이 독립전쟁을 일으켜 자유를 얻어냈다. 영국은 상공인이 주도하는 의회가 봉건적 왕권과 오랫동안 투쟁 끝에 권력분립과 신분평등을 이루고 사유재산권을 얻어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봉건적 막부지배를 무너뜨리고자 마자 신분제 폐지령을 내리고 입헌군주국으로 도약하면서 근대 산업이 발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정 박제가가 <북학의>나 <소회> 등을 통하여 ‘양반도 일해야 한다’, ‘놀고먹는 선비를 도태시켜야 한다’, ‘과거제를 철폐하고 지방에서도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상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릇 상인이...사농공상 네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10분의 3의 비중을 차지하여야 한다.”⁴⁶⁾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박제가의 신분평등 주장들은 봉건적 신분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과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

신분평등과 상공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실제 개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갑신정변과 1895년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갑오경장에서 나왔다. 불행히도 이들 개혁과 혁명의 시도는 모두 실패와 좌절로 끝나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장을 바꾸어 살펴보고 다만 여기서는 실학파 조정 박제가의 신분개혁 주장과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가 강력히 제시한 대책의 하나는 과거제도를 철폐하여 선비를 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북학의> 과거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수만 내지 수십만이 시험을 치르고 순식간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그 많은 시험지를 짧은 시간에 누가 찬찬히 보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목할 것은 옛 임금이 다스릴 때는 400명이 응시를 했다고 축하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백배가 넘는 인원(실제로 1800년 경과 정시 참가 인원)이 응시하였다. 이러한 많은 인원이 일을 하지 않고 거의 평생 과거시험에 몰두하며 놀고 먹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진상본 북학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6) 안대희 감역 북학의, p134

“농업을 장려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농업에 해를 끼치는 것을 먼저 제거하고... 첫 번째로 선비를 도태시키는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따져보면, ...소과와 대과를 치르노라 시험장에 나오는 자가 거의 10만 명을 넘습니다. ...이들 무리의 부자와 형제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또한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 농민들을 머슴으로 부리는 자들입니다. 농업은 경시되고 과거 시험은 날로 중시되게 마련입니다. ...실상은 선비는 농사를 망치는 가장 심각한 존재입니다. 이 무리가 나라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한 지 지금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불어나는 선비를 도태시키지는 않고 반대로 날마다 힘을 잃어가는 농부들만 꾸짖어(야)...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⁴⁷⁾

인구의 과반수나 되는 일하지 않는 선비를 도태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유생의 도태’라는 항목에서 이를 다시 논한다. “유생이 속한 사문(師門)의 장으로 하여금...추천장을 써서 보증하고...지방의 관장이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선발하여 서울로 보낸다.”⁴⁸⁾ 이런 과정을 포함하여 네 단계를 거쳐 시험을 보게 하면 수험생이 줄어들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신분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난장판과 같아 거의 기능이 마비된 당시의 과거제 폐해를, 그저 절차개혁을 통해 개선해 보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놀고먹는 사족도 일을 해야 하고 농공상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인이나 천민 신분이 하는 일에 양반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신분제 타파의 의지가 들어 있었다. 신분제 타파의 의지는 평민 신분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과거론2에서 “조정에서 문벌을 따져 인재를 등용하는데 문벌 집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비천한 신분이다. 그러나 바위굴에 거처하며 한미하게 사는 은사나 여항에서 부대끼며 사는 많은 평민들 가운데 오히려 한평생 깨끗하게 행동하며 학생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온 나라에 호령을 내려 별렬 출신 밖에서 재능과 덕망이 출중한 자와 기술과 예술 가운데 하나라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천거하라! 천거한 자에는 상을 주되...”⁴⁹⁾ 라고 하여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능 있는 자를 발굴 등용하자는 주장을 폈다.

직접 왕에게 건의하기도 하고 그의 저서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파하기도 한 이같은 박제가의 신분이동에 관한 여러 주장과 대책은 나라의 인재 등용 방식을 개혁하여 기존의 과거제를 혁파하고 평민 중에서도 능력있는 자를 뽑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신분 이동관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었으나 봉건적 신분제의 근간을 그대로 둔 채 계급 간의 직업한계를 풀어 농업과 상업에 양반들이 참여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산업화를 이끌 상공인 세력이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신분제가 혁파되어 일할 의욕이 넘쳐나고 모험과 창의력을 발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상공업인이 등장하고 상공업이 성장하는

47) 안대희역 북학의, pp 293-295
 48) 안대희역 북학의, p. 336
 49) 안대희역 북학의, pp.219-220

것이다. 이것은 사농공상의 차별적 신분제의 혁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왕족을 포함한 봉건적 귀족 계급 인사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였다. 이런 혁명을 거쳐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신분평등은 이같이 혁명적 변화를 거쳐 만들어지고 그 결과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평등 신분제도로의 혁명은 없었다.

IV. 개화파의 근대산업화 개혁 시도와 동학농민혁명의 좌절

개항이후 근대 산업화의 소중한 계기는 갑신정변, 갑오 농민혁명, 갑오개혁 등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상공인 세력이 형성되지 않아 추진력이 미약한데 더하여 봉건왕조가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막아버렸다. 특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강압적 개입으로 농민혁명이 좌절되고 개화파의 개혁 노력이 실패하거나 왜곡되어 버렸다. 자주독립국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었다.

1. 갑신정변의 정강과 실패 원인

개화파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역관 오경석, 개화 승 이동인, 의사이며 사상가 유흥기 등 중인들까지 참여한 혁신파들로 19세기 중후반 등장한다. 1870년대 초 그 문하의 김옥균 주도로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 신진 혁신 관리 등이 참여하여 ‘자수자강’의 기치 아래 새로운 국제 정세에 맞게 국가 정치를 개혁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한 정치세력을 형성한다. 엄격한 봉건적 신분제의 장벽을 넘어 사회 각 계층에서 참여하여 정치적 비밀결사 ‘충의계’를 조직한다.⁵⁰⁾

이들의 노력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82년 7월 정부 내에 기무처가 조직되었다. 기무처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과제를 협의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의정부를 통해 국왕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합의제 기관인 기무처 구성원 7명 중 5명이 개화파이거나 그 지지자로 수구파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⁵¹⁾ 1883년 3월 정부 직속의 방문국이 창설된다. 개화파 성원들과 젊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편집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해 10월부터 10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한성순보’가 발행되기 시작한다. 우정국 순경국 치도국 등도 설치된다.

1884년 우정국 낙성식 연회를 계기로 김옥균 등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고 10월 19일 새 정부 정강을 공포하였다. 정강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여 자주권을 수호하고 의회를 설치하여 국정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분제 개혁과 근대적 상공업 발달을 위한 구상이 포함되었다. 즉 정강에는 봉건적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시민

50) 최윤규(1988), pp.33-34

51) 최윤규(1988), p.35

의 평등권을 실현할 것들을 내세웠고 자본주의적 기업들을 육성하며 국가의 경제생활을 전반적으로 근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내외 공채를 모집하여 산업, 운수 등을 발전시키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봉건시대의 불합리한 제도들의 변혁도 내걸었다. 봉건시대 농민 착취의 중요 수단이었던 환곡제도 폐지, 탐욕적이고 포악스러운 양반 관리들의 청산,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전국적 지조법 개정과 정전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함께 호조에 의한 국가재정의 통일적 관리와 국가의 세입 세출의 단일화, 국가재정 체계의 근대적 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내세운 경제강령을 평가해 보면 자본주의적 기업의 육성과 국가의 경제생활 전반의 근대화를 위한 조치들이 제한적이지만 조선시대 최초로 제시된 것이었다.⁵²⁾

사회문화 부문 정강에는 교육, 보건을 근대적으로 개편하고, 경찰과 재판제도도 근대적인 제도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순사제도 설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군사제도도 근대적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정강에 일관된 기본적인 요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사회생활의 전반적 분야를 부르주아적 근대화의 기초위에서 혁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강은 엄중한 제한성이 있었다. 이 개혁안을 밀어줄 사회적 세력인 상공인 계급이나 시민 세력이 없는 가운데 위로부터 너무 급진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부르주아라는 계급적 기반이 결여된 상황에서 일어난 혁신운동이었다. 또한 토지혁명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이루려면 토지개혁으로 이에 얽매었던 신분제와 경제적 속박을 풀어야 근대화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자원이 생겨난다. 농민의 피착취적 생산관계와 불평등한 봉건적 신분제를 해체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강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와 농민에 대한 봉건적 착취의 청산을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위에서 시도된 개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농민들로부터 받아 낸 재정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발전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실질적 평등실현 주장은 10년 후 사민평등과 토지균등 분배를 주장한 갑오 농민 혁명의 구호로 등장한다.

갑신정변은 청나라 주둔군에 의해 3일 만에 진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일본인들에게 피해보상과 일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했다. 즉 일본 외무상 이노우에가 1884년 11.14 육군 다카시마와 함께 2개 대대의 군사와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으로 밀고 들어왔다. 11월 24일 이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중국 군대에 의해 살해된 일본인 가족들 부양비 11만원과 불탄 공사관 복원비용 2만원 도합 13만원의 피해보상과 일본군의 서울 주둔 허용 등을 포함한 억압적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⁵³⁾ 이 조약은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52) 최윤규(1988), p.41

53) 일본군의 조선 진출이 허용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후 일본인 피해를 보상 등으로 맺은 제물포조약이다. 갑신정변 후 맺은 한성조약에서는 피해보상과 더불어 일본군의 한성 주둔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885년 4월 텐진 조약에 의하여 중국군과 일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첫 부르주아 개혁으로서 우리나라 부르주아 민족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개화파의 정강은 반동적인 봉건 통치자들의 탄압과 개화파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제한성, 개화파 지도 세력이 범한 일련의 전술적 착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봉건 중국의 침략적 무력 간섭 등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개화파 정권은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⁵⁴⁾

다만 갑신정변은 그 중심사상인 개화사상과 함께 그 뒤 근대 민족운동 시기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개화사상은 1894년 농민전쟁 때 농민군이 제기한 혁명적 요구들 속에 일부 반영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그리고 자유민권운동 애국 문화운동 등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반봉건 반침략 운동들은 모두 개화사상과 근대 부르주아 혁명 시도이었던 갑신정변과의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⁵⁵⁾

2. 사민평등과 토지균분을 내건 동학농민혁명의 좌절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은 모두 한울님이라는 사민평등의 주장을 내걸고 일어난 혁명 운동이었다. 사민평등과 토지 균등 분배 등을 들고나온 동학혁명은 신분제의 전면 해체와 평등을 주장한 것으로 근대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었다. 천민으로 취급받던 상공인과 노비들의 해방과 평등한 대우가 시작되면 근대적 산업화의 세력이 등장할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적 상공업을 일으킬 자유로운 상공인 세력이 등장할 때 자본가들에 의한 산업진흥과 공장 노동자 계급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동학은 사람을 한울님으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당연히 신분제 폐지, 남녀, 과부, 직업 등으로부터 해방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미숙하기는 하나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적 신분 개혁론이었다. 이것이 근대 산업화를 이끌 주체 세력이 나타나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다. 농업이 중심이던 당시 토지에 얽매어 신분적으로 부자유스럽고 불평등하였던 농민들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들고 일어난 혁명이기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평등을 실현하여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기초를 만들 수도 있는 첫걸음이었다 하겠다.

1894년 일어났던 전봉준이 이끈 동학 농민혁명군은 초정의 신분 이동론은 물론 개화파 갑신정변의 정강에 비해 훨씬 혁신적인 계급타파론을 들고나왔다. 주로 농민으로 구성된 동학혁명군은 우선 노비문서 폐기 등 노예제 철폐를 확실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한울님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손님이 오면 한울님이 오셨다고 대접하여야 한다고 하고 집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한울님같이 공경하라고 하였다. 며느리를 사랑하고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며 노예를 자식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였다. 관리채용에도 차별을 철폐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라고 하였다. 반면에 갑신정변의 정강에도 나와 있는 불량한 유림과 양반무리를 응징하고 탐관

54) 최윤규(1988), p.42

55) 최윤규(1988), p.42

오리를 조사하여 엄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⁵⁶⁾

토지를 균등 분배하고 횡포한 부호를 응징한다는 혁신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았던 당시의 기본 생산요소인 토지를 균등 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이것은 갑신정변에서 다루지 않았던 봉건적 토지 소유와 봉건적 착취적 관계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반봉건의 핵심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었다.

이같이 동학혁명군은 19세기 말 계급타파와 평등의 근대적 신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본성에 관한 혁명적 선언이었고 현 지배층인 유림과 양반을 타도하고 노예 문서 파기와 토지의 균등분배 등의 기본적인 조치로 사민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1세기 전 조정 박제가나 10년 전 개화파에 비하면 신분제 개혁에서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가 상공인이 아니라 농민이었다. 상공업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서 일어난 농민혁명이었다. 산업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나 이를 위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 등 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공장제 생산과 노동권 등에 대한 주장도 없었다. 사민평등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한울님인 인간이 사회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등 즉 과학혁명,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의 발달과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았다. 아직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공인들의 주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무역개방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해외무역을 중요시했던 서양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상공업을 근대적 산업화로 이끌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항 이후 외래 기업들의 진출과 무역으로 국내 상공업의 장악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학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왕조와 양반 세력이 외세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능력이 부족하여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진주하게 되었고,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 결국 외세와 봉건왕조가 결탁하여 농민혁명을 진압한 것이다. 자주적 변혁의 기회를 외세 침략세력을 끌어들여 무산시킨 것이다.

청나라 군대는 1894년 6월에 조선에 도착했으며, 일본군은 그 직후인 7월에 조선에 진주했다. 그 후 이들 간에 청일전쟁⁵⁷⁾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은 조선 정부군과 함께 1894년 12월 7일 우금치 전투⁵⁸⁾에서 동학군을 전멸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3. 일제에 의해 변질된 갑오개혁

56) 이상 동학혁명군이 내건 4대 덕목과 12개 폐정개혁안은 보은 동학혁명 기념공원에서 발췌

57)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25일에 발발하여 1895년 4월 17일에 끝났다. 이 전쟁은 조선에 대한宗主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벌인 전쟁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58) 우금치 전투는 1894년 11월 20일(음력 10월 23일)부터 12월 7일(음력 11월 11일)까지 계속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군 간에 맺은 전주화약(和約)⁵⁹⁾(1894.6.6)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894년 7월부터 군국기무처를 만들어 개혁안을 검토하였다. 군국기무처로 시작된 갑오개혁은 실제로 3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는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전쟁이 끝나는 1894.7-12간 실시되었고 2차는 군국기무처가 해산되고 내각제가 도입된 후 1894.12-1895.7간, 3차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인 1895.10에서 아관파천 직전 1896.2 까지 이루어졌다.

탐관오리의 처벌, 횡포한 부호 처벌, 유림과 양반 처벌,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신분제 폐지, 일반천민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량 갖을 없앨 것, 청상과부 재혼 허용, 잡세 일체 폐지, 관리 채용의 공정성, 일본과의 내통자 처벌, 공사채 무효화, 토지의 균등 분배 등의 전주화약에 따라 갑오 농민 혁명의 주요 공약 내용을 상당수 반영한 것이 갑오개혁 안이었다. 다만 토지 균등 분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홍집을 총재로 한 군국기무처는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임시 합의기관으로서,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 전근대적인 여러 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국기무처의 회의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맡았다.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하여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의정부를 중앙통치 중추 기관으로 만들어, 그 밑에 조선의 6조(六曹) 체계를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아문(八衙門)으로 개편하였다.

박제가가 주장했던 과거제 폐지가 공식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은 분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조세의 현금 납부제를 시행하였다. 또 경무청이 설치되어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7월 30일 대대적인 신분제 개혁 등을 단행하였다. 즉, 문벌과 반상제도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의 혁파,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의 폐지, 양자 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부제가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실현되면 모처럼 진일보한 신분제 개혁을 이루어 근대 산업화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내 개화파 인사들에 의한 1894년 1차 개혁인 갑오개혁은 일본 침략자들의 책동으로 합의제 의결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자문기구로 격하함으로써 제대로 실시되기도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봉건 중국 세력이 힘을 잃자, 조선을 독점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본격화하였다. 내각제를 시행하고 정부 내에 친일 세력을 참여시켜 영향을 행사하면서 군국기무처를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⁶⁰⁾

이노우에 공사가 10월 23-24에 국왕의 참가 아래 진행된 대신 회의에서 20개 조의 '개혁안'을 내놓고 그것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⁶¹⁾ 소위 이노우에 개혁안 20조다.

59) 전주화약(全州和約)은 1894년 6월 6일, 동학농민군과 조선 중앙정부가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전주성을 점령한 후, 조선 중앙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결되었다. 전주화약의 주요 내용은 농민군은 해산하고 조선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지방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방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기로 한 약속이다.

60) 최윤규(1988), p.116

이 개혁안은 다시 왕의 전제권을 강화하고 의결권을 가졌던 군국기무처를 해산하는 등 갑오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에 일본 고문관의 배치와 일본 유학생 파견 등도 포함하고 있다. 낙후한 봉건제도를 유지 고착시키면서 식민 지배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침략적 내정간섭 안 성격의 개혁안이었다.⁶²⁾

이러한 일제 내정간섭하에서 진행된 2차 개혁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군국기무처를 의결권이 없는 내각의 자문기구로 만들었다. 내각에 8아문을 개편하여 7부를 두었다. 고종은 개혁이 내각으로 이관된 다음인 1894.12.12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반영한 흥범 14조를 제정하고 제2차 개혁안이 검토 중인 1895. 1. 7에 반포했다. 흥범 14조는 자주독립의 확립⁶³⁾, 왕실과 정부의 분리, 지방 행정의 개혁, 교육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1차 갑오개혁의 주요 목표와 일치하며, 개혁 방침을 밝힌 왕실과 정부의 구분, 조세법률주의, 민법과 형법 구분,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등용, 해외유학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월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 행정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사적 권한을 더욱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구축하였다.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을 도입하였다.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조선의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다.

제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17일 주 조선 일본 공사 이노우에의 안에 따라 구성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가 중심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여 만든 총 213건의 개혁안을 제정·공포·실시하는 것이었다. 제2차 개혁 기간에 이노우에 공사가 추천한 40여 명의 일본인 고문관들이 참여하여 1894년 12월 중순과 1895년 4월 중순에 공포된 개혁안 일부분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대부분은 주로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인 개혁파 관료들에 의해 입안·제정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박영효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활동을 벌인 개혁파 인사로서 213개의 개혁안 중 적어도 68개에 자서(自署)하였다.⁶⁴⁾ 박영효는 1895년 7월 6일 일본으로 재차 망명했다. 이는 제2차 갑오개혁 기간 동안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던 중,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왕이 전제권을 회복하고 군국기무처를 집행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으로 격하한 가운데 만들어진 개혁안이라서 오히려 갑오개혁을 파탄시키고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보다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목적을 손쉽게 이루려는데 이

61) 이보다 10일전인 10월 9일 이노우에 공사는 고종과 민비를 함께 알현하여 군주권에 관한 질문을 하자 “백성과 재산이 모두 나의 것으로,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여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라는 답을 듣고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적 군주제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Ⅲ장 제3절 및 주 43 참조

62) 최윤규(1988), p117

63) 이것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며 일본의 간섭은 더욱 강화된 때이다.

64) 특히 이 68개의 개혁안 중 과반수가 1895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즉 박영효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시기에 반포되었다.

용되었다. 즉 그것은 조선 정부의 행정기구와 조세, 군사, 경찰 등 각종 제도를 ‘개혁’ 하는 것이었으나 국가의 모든 권력을 부패 무능하고 어리석은 국왕에 집중시킴으로써 그의 절대주의적 왕권을 이용하여 일제의 조선 침략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조선 국민 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더욱 편리한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⁶⁵⁾

그러므로 갑오개혁은 국왕의 전제정으로 되돌아간 2차부터 변질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은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 개혁 내용이 ‘자주독립’과 같이 겉으로 번지르르하여도 실은 자주성을 잃은 형식적인 껍데기일 뿐이었다.

제3차 개혁(을미개혁)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직후부터 1896년 2월 11일(1895년 음력 12월 28일) 아관파천 직전까지 가장 친일적 성향이 짙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차 김홍집 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태양력을 도입하여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연호를 건양으로 변경했다. 단발령을 단행하였고, 정부 주도로 종두를 시행하였다⁶⁶⁾. 또한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단발령의 강압적 시행은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일반 백성들의 반일, 반정부 감정을 폭발시켰고, 대규모 항일 의병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 운동을 을미의병이라고도 한다,

4. 갑오개혁의 평가와 그 후 영향

동학혁명 과정에서 농민군과 정부 간에 맺은 전주화약에 따라 1894년 7월부터 시작한 김홍집의 군국기무처의 1차 개혁은 신분제 폐지 등 일정한 진전이 있는 개혁안이었다. 농업개혁, 상공업 진흥 등 근대 산업화를 위한 뚜렷한 내용은 없었다. 갑오경장이 문벌과 신분계급제 폐지, 연좌제 폐지 등 신분평등에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산업화를 위한 사유재산제도 확립, 기업제도 도입, 자유계약 등 근대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장 개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화를 위한 토지 소유관계의 근대화나 노동권 도입 등도 거론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화의 세력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를 낼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농민세력과 연대나 협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일제의 압력과 일제의 비호로 이어진 2차와 3차 개혁은 자주성이 없는 개혁안으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노우에가 동학진압에서 일본군을 철수하겠다고 고종을 압박하면서 내민 개혁안에 따라 내각제를 도입하고 갑오개혁의 집행기구인 군국기무처를 내각의 자문기구로 격하시킨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국왕의 전제권이 회복되고 김홍집 박영호 연립내각이 출범되어 2차와 3차 개혁은 일본의 간섭하에 자주성없는 개혁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2-3차는 수십명의 일본 고문관 파견과 그들의 지도와 협력하에 추진되어 자주

65) 최윤규 p.117

66) 사설 의원에서의 인두 및 우두 접종은 그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적 근대 산업화를 오히려 방해하였다. 일본의 지도와 간섭으로 조선의 경제를 일본이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용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봉건적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아관파천에서 귀환한 고종은 200여 조항에 이르는 갑오개혁안을 본인이 압력을 받아 승인한 것으로 '짐의 뜻이 아니다'라 하여 무시하여 버림으로써 갑오개혁은 좌절되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갑오개혁을 주관한 김홍집은 2차부터 일본인들의 조종에 의해 변질된 채 추진하였다 하여 친일파로 몰려 반일 민중들의 습격을 받아 피살되었다. 김홍집이 살해된 후, 갑오개혁은 큰 타격을 받았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개혁을 주도하던 인물들도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갑오개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다만 갑오개혁은 고종에 의해 중단되었으나 그 후 민중들이 참여하는 반외세, 반봉건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는 등 신분 평등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896년 7월에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의 주도로 독립협회가 설립되었다. 독립협회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내정 개혁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1898년 3월부터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했다. 민중의 정치참여가 시작된 것은 신분평등을 향한 봉건적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가 외세의 간섭이 없었으면 자주적 근대화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지만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노골화된 식민지화 간섭으로 그 후에는 일제에 반대하는 자주 독립운동으로 변화되어 나갔다. 자주권이 없는 국민의 사회발전 에너지 E1을 생성 확산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에 정부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독립협회도 1898년 12월에 해산 명령을 받으며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사이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 황제가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면서 조선을 계승한 국가로 대한제국이 출범하였다.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러 개혁을 시도했다. 이를 광무개혁이라 하며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이루어질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지방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방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또한, 상공업 진흥을 위해 공장과 각종 회사를 설립하고, 서양 기술을 도입하려 했다.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실업학교와 기술학교 등 각종 학교를 설립했다. 전화, 우편, 전차, 철도, 도로 등 근대적 시설도 확충하였다.

광무개혁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중요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재정 부족과 일본과 청나라 등 외세의 간섭으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보수적인 세력과 일부 관료들의 반발로 개혁이 저항에 부딪혔다. 광무개혁은 은행과 제조업 등 상공업이 등장하여 자주적 산업화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할 때 추진된 대한제국의 근대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였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황제가 해야하면서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하고 이어서 1910년 8월 29일 한

일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다. 이로써 자주적 산업화는 중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외래 침략세력을 타도하고 독립을 시도하는 반외세 민족독립운동으로 역사적 목표가 바뀐다. 3.1운동에 이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도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소작쟁의, 노동운동 등이 전개된다. 이러한 운동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산업화 등 사회발전의 에너지 (E1)가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항운동이었다. 자주적 상공업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없이는 개인의 좋은 삶과 사회발전도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운동이었다.

결론

조선시대 산업화는 시도되지 않다가 개항 후 비로소 갑신정변 농민혁명 갑오개혁 등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담당할 상공인 세력이 등장하여야 한다. 근대 상공인들은 봉건적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체적인 시민들로 자유, 근면, 경제적 열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기업제도, 사유재산제도, 공정거래제도 등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사회적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는 생명의 안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제도화하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조선 말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항 후 산업화를 위한 개혁이 시작되려 했으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공인 세력 기반 위에서 일본의 침략적 간섭으로 자주성을 상실하고 끌려 다녔다. 그 과정에서 봉건 왕조와 지배세력이 사민평등을 주장한 농민혁명과 개화파의 개혁노력을 억압함은 물론 외세를 끌어들여 이런 개혁운동을 무산시키고 산업화의 에너지를 말살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일 합병조약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빼앗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선진사례에 비추어 조선시대 산업화가 지체된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엄격한 신분제도와 지배계급의 산업에 대한 봉건적 의식이 강하여 19세기 중반까지 오랫동안 상공인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둘째 19세기 후반부터 갑신정변 농민혁명 그리고 갑오개혁 등 신분평등과 산업화를 위한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나 봉건왕조의 탄압 및 외세의 강압적 간섭으로 추진력을 제압당하였다.

셋째 일본의 조직적이고 강압적 식민지화 침략으로 평등실현, 자주적 독립국가 수립 등 근대 산업화를 위한 개혁 시도는 실패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산업화보다 자주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독립운동으로 역사적 목표가 바뀌었다. 따라서 조선 518년간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조선 상공인 형성과 관련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나?

명치유신으로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병합하여 일본경제에 편입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한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나 억제하였나?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일부 공업이 등장하여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상공인 세력이 형성되어 주체적으로 상공업을 성장시킨 것은 아니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점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에 의한 산업화가 일부 진행되었다. 일본인과 일본 기업이 자국의 산업화와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 목적을 위하여 성장시킨 것이었다. 실제로 대륙침략에 필요한 철도, 발전소, 화학 공장 등과 일부 섬유산업이 등장하였다. 이것을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산업화라고 할 수 없다. 1942년 한국의 공업 설비 자본 총액 중 한국인의 자본은 1.56%였다.⁶⁷⁾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 국가의 역할이 없었다. 독립된 국가가 있어야 자주적 산업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공인 계급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상공인으로 성장했어야 할 한국인들은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에 의한 토지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소유권 확인 등 근대적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일본인 지주 증가와 소작인 증가에서 보듯이 봉건적 수탈 체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조선의 토지관리가 주목적이었다. 실제로 주권국 한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제대로 했더라면 그 목적이 지주 소작 관계의 해체와 평등한 개인의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신분평등을 법제화한 민주공화국이 할 수 있는 일로 농업생산력 확대와 더불어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로 산업인력의 확대를 가는 기회와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이것을 이룬 것은 해방 후 농지개혁이었고 이때 비로소 평등실현과 산업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30년대 일부 산업의 건설은 일본의 만주와 중국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등하고 주체적인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산업화는 아니었다. 실제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에게에는 지주소작제와 같은 전 근대적 신분제가 지속되었고 거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별이 더해졌다. 해외무역도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예 상태에 있는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해방시키자”라고 한 카이로 선언(1943)은 한국이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였음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 의한 산업자본의 형성과 주체적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67) 최윤규, p 336

참고문헌

- 강철규(2007),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경제발전연구], 제13권 제1호, 2007. 6
- 강철규(2016), 강한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평론
- 강철규(2023), “사회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인간존중의 가치실현이 발전”, 경제발전 연구, 제29권 제3호
- 박제가(1778), 北學議, 이익성 역(1971), 을유문화사
- 박제가(1778), 완역정본 북학의, 안대희 교감역주(2013), 돌베개
- 박종인(2019), 대한민국 징비록, 와이즈맵
-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II(1780), 옥갑야화-허생전, 민족문화추진회(1968), 고전국역총서 19
- 박진철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종의 왕권강화책 연구”, 박종인 대한민국 징비록에서 재인용
- 이익(1999), 성호사설, 최석기 옮김 1999, 한길사
-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1월 1일
- 최윤규(1988), 근현대 조선경제사, 도서출판 갈무지
- 통계청, [역사 속 통계 8] 통계로 보는 조선의 신분제 - 양반통계, 조선후기 신분통계, 신분통계, 양반통계 [통계청](#) 공식블로그, 2012. 11. 8.
- 피터 퍼타도, 마이클 우드 편 (2009),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위그노가 프랑스에서 달아나다”, 김희진, 박누리 역, 마로니에북스
- 坂野潤治, 大野健一(2010), 明治維新-1858-1881, 講談社現代新書2031, 講談社
- 河合 敦(2019), 明治日本の産業革命, <https://www.nippon.com/ja/japan-topics/b06904/>
- Broadberry(2011), *When Did BRITAIN Industrialise? The Sectoral Distribution of The Labour Force And Labour Productivity in BRITAIN, 1381-1851*; <http://www.lse.ac.uk/economicHistory/pdf/Broadberry/SectoralsharesGB13c.pdf>
- Bruckhardt(1860),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 Daron Acemoglu & James A. Robinson(2012),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옮김, 시공사, 2012
- Daron Acemoglu and Simon Johnson(2023), *Power and Progress-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김승진 (2023), 권력과 진보-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생각의 힘
- Montesquieu(1749), *The Spirit of the Law*, 법의 정신, 2004, 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Russel Shorto(2013), *Amsterdam*, 허형은 역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2016, 책세상

Angus Maddison(2007), 세계경제: 역사상의 통계, Rogers(2010) 에서 재인용